

# 90년대 한국 미래사회의 시나리오 —경제·사회부문을 중심으로—

房 錫 炫\*

〈目 次〉	
I. 시나리오 작성의 기본구도	III. 정보화 사회의 전개양상 : 대안적 시나리오
II. 주요변수의 선정	

## 〈要 約〉

정보 통신 기술의 혁신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정보화 사회로의 진전이라는 흐름속에서 사회 전반의 변동 양상과 정부의 역할 기대의 변화 양태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정부 조직과 기능의 변화·발전 방향을 제시하는데 이 논문은 목적을 두고 있다.

정부는 내적으로 경제 사회 전반의 구조 변화와, 국민의 사고의 전환, 민주화, 지방화, 분권화 등으로 나타나는 참여수요, 복지요구 등에 대하여 대응하고, 외적으로 불려화되고 개방화된 체제에서의 위치를 정립해야 한다는 정책 과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이를 위해 현재의 후기 산업사회, 정보화 사회로의 진전을 분석하고, 종합적인 시나리오를 분석하는 작업을 하였다.

## I. 시나리오 작성의 기본구도

본 논문에서는 기본전제와 가정, 그리고 선정된 주요 변수의 결합양태에 따라 시나리오 I과 시나리오 II를 제시하고 있다. 시나리오 I은 비교적 비관적인 사회변동양상을 그리고 있고, 시나리오 II는 낙관적인 방향으로 전개되는 사회변동양상을 그리고 있다. 즉, 시나리오 I에서는 현재의 상황이 더욱 악화되는 방향으로 사회변동이 진행되어 이중구조의 모순이 확대재생산되고, 경쟁력 상실로 인한 저성장기 혹은 경제침체기의 도래를 가정하고 있는 반면에, 시나리오 II에서는 정치발전, 혁신의 도입, 정보통신 기술의 혁신 등에 의해 기존의 사회구조적 갈등과 격차가 원만히 해소되고, 국가경제의 경쟁력 확보로 안정적 경제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여기서 제시하는 시나리오 I

\* 서울대학교 行政大學院 教授

과 Ⅱ는 사회변동 양상에 관한 이념형적(ideal-type) 모형으로서의 성격 을 띠고 있기 때문에 실제의 미래 모습은 이 양자가 혼합되는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하겠다. 따라서 시나리오 I과 Ⅱ의 혼합안을 상정할 경우 본 연구에서 작성하는 시나리오는 실질적으로 세가지 형태를 이루게 된다.

## Ⅱ. 주요변수의 선정

미래는 현재의 상황으로 부터 다양한 가능성을 안고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과정에서는 현재의 상황에 기초하여 미래를 이끄는 잠재적인 발전경로에 대한 모형을 작성하여 다양한 대안적인 미래를 예측하고, 가장 그럴듯한 미래의 모습을 결정하게 된다.<sup>1)</sup> 특히 잠재적인 발전경로에 대한 대안 선택에서 한국사회가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대화에 어느 정도로 신속하고 합의를 의한 총체적인 대응 능력을 갖추는 가는 중요하다.

시나리오작성과 미래예측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잠재적인 발전경로에 대한 정확한 묘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회변동의 핵심을 이루는 주요변수가 합리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

즉, 논문에서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90년대의 사회변동양상에 관한 시나리오를 작성 하면서 도입하고 있는 주요 변수는 다음과 같다.

### 1. 사회발전의 경로

미래 예측에 있어서 기본 틀을 이루는 것은 향후 사회발전의 경로에 대해 어떠한 이념형적 모형(ideal-type)에 입각하고 있는냐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산업사회의 이후의 사회발전의 경로와 관련하여서는 후기산업사회(post-industrial society), 정보화사회(information society) 등이 이념형적 모형으로 제시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사회의 모습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사회변동양상은 후기산업사회 또는 정보화사회로 발전해 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후기산업사회 또는 정보화사회에서는 산업화 과정에서 파생된 도시와 농촌의 격차, 영·호남등 지역간의 격차, 그리고 계층간 격차 등 제반 사회적 불균형의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채 여기에 정보화사회의 진행과정에서 파생되는 새로운 격차와 불균형의 문제가 부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보화 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격차와 불균형의 문제는 전통산업과 새

1 Thomas E. Jones, Option for the Futureu (Praeger Publishers, 1980), pp.14-21.

로운 정보산업간의 격차, 그리고 정보를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간의 갈등과 격차의 양태로 발생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정보화사회에서 구조적 문제점은 이와 같은 이중사회 혹은 이중성(dualism)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가 핵심으로 등장하게 된다.<sup>2)</sup>

니나리오작성의 기초를 이루는 사회발전의 경로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핵심적인 사항은 과연 앞으로 우리나라의 사회발전이 후기산업사회를 거쳐서 정보화 사회로 진전되는 경로를 따를 것인지, 아니면 현재의 산업사회에서 곧바로 정보화사회로 진전되는 경로를 따를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이 양자의 이념형적 사회모습이 혼재된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제하는 가운데 후기산업사회는 정보화사회로 나아가는 과도기적 현상으로 가정하고자 한다. 그러나 특정 부문에 있어서는 산업사회에서 곧바로 정보화사회로 진입하는 단절적 변화의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음을 부연하는 것은 아니다.

## 2. 삶의 질의 추구

사회변동을 야기하는 주요한 원인을 인적 요소에서 찾을 때 가장 대표적인 변수가 바로 개인이 추구하는 목표와 사회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다. 전이과정으로서의 후기산업사회 및 정보화사회에서 인간이 추구하는 목표는 물질적 가치보다는 개인의 삶의 질적 수준 제고에 주어질 것이다. 이와 같은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참여 등 개인의 가치의 고양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게 될 것이며, 개성을 존중하는 다원적인 가치관이 등장하게 될 것이다.

## 3. 정부정책(관리)

사회변동의 관리주체로서 또는 변동의 촉진자로서의 행정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느냐에 따라 사회변동의 양상이 달라지게 될 것임은 자명하다고 하겠다. 행정에 대한 사회적 수요의 변화에 대응하여 행정의 과학기술정책, 교육정책, 복지정책 등이 어떠한 양태로 전개될 것인가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2) Ian Miles, "The New Post-Industrial State," Futures, December, 1985, p. 588.

## I. 경제적 기초 및 구조

경제적 측면은 후기산업사회나 정보화 사회의 변동양상을 결정하는 요인인 동시에 변동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경제기초의 변동이 정치권력과 사회가치관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경제요인이 사회변동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반면, 후기산업사회나 정보화사회에서 종전의 상품생산경제가 서비스 경제로 전환되거나 고용구조가 변동하는 등의 현상은 다른 변수들의 작용에 의해 나타나는 결과적인 측면이다. 한편, 경제성장률의 경우에는 결과변수와 원인변수로서 동시에 작용하는 성격이 강하다.

경제적 기초와 구조변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정치적 변수로서는 남북통일을 들 수 있다. 남북통일이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통일된 한반도의 경제기초와 구조가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다.

## II. 혁신의 추구

전반적인 사회구조가 후기산업사회 또는 정보화 사회로 전환됨과 동시에 정치, 행정, 경제 등 사회 각 부문에서 점진적 변화가 아닌 혁신적 변화의 필요성이 점차 강하게 부각될 것이다. 혁신의 추구없이는 사회 및 경제의 지속적 발전과 실용주의 시대에 국제적 경쟁구조 속에서 국가적 위상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곤란해 질 것이다.

정치권력의 분산과 경제부문에 대한 규제와 간섭의 축소는 앞으로 하나의 큰 흐름으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자치의 확대에 따라 정치, 행정적 측면에서 중앙·지방간 권력배분이 더욱 분권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경제측면에 있어서도 민간부문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민간경제활동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 개입의 범위는 축소되면서 기업들에게 자유경쟁과 자율성을 확대하여 주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경쟁력의 제고를 위하여 새로운 측면(예, 기술개발등)에서는 정부와 기업의 협력관계가 더욱 강화되는 부분도 등장하게 될 것이다.

### (1. 중요기술 : 첨단정보기술

사회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기본 축으로서 중요 기술과 중요 자원은 넓은 의

미에서는 경제적 요인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양자를 경제적 요인과는 구분하는 것은 사회변동과 경제의 변동에 이 두 요인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후기산업사회나 정보화사회에서 어떤 기술이 활용되느냐에 따라 사회변동이 큰 차이를 보이게 된다. 사실 후기산업사회와 정보화사회를 구분해 주는 가장 중요한 국면도 활용되는 기술수준과 그 양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후기산업사회에서는 역할적 자동화 기술이 주류를 이루는 데 반하여 정보화 사회에서는 정보기술 또는 두뇌적 자동화기술이 주류를 이루게 된다. 따라서 정보화사회에서의 변동의 속도와 수준은 첨단정보기술의 확산이 당해 사회에서 얼마나 빨리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이다.<sup>3)</sup>

## 7. 생태적 문제

에너지와 자원, 자연환경 등 인간의 생태적 문제와 관련된 측면도 사회변동의 모습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와 천연자원의 부족이 심화되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인간의 노력이 다방면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삶의 질을 추구하는 개인적 목표와 사회가치관의 변화는 자연환경의 보호, 즉 공해와 오염의 발생을 방지하고 해소하려는 노력으로 연결될 것이다. 그럴 경우 환경문제가 경제활동의 전개에 새로운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는 동시에 경제기초와 구조를 변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 8. 국제환경 : global화 및 블록화

향후 정치·경제적 측면에서 개방화·국제화가 확대될 경우 국제환경의 변동 양상이 당해 국가의 정치·경제·사회적 변동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경제적 측면에서 global화, 블록화 및 시장개방의 확대는 대외지향적인 경제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활동을 크게 좌우하게 될 것이다.

국제환경면에서의 힘의 균형의 다원화 현상 및 국제무대에서의 일본의 영향력 증대에 따라 한반도의 통일문제, 한·일간 정치, 경제적 관계, 아시아에서의 한국의 지위, 일본, 북한관계 등이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3) 金光雄 외 3인, 情報·通信革命을 위한 行政人의 認識調査 및 成長·發展 沮害要因分析('89 전기통신 학술 연구 보고서), 1989. 12을 참조한 것임.

### Ⅲ. 정보화 사회의 전개양상 : 대안적 시나리오

#### 1. 시나리오 I : 비판론

##### (1) 이중구조의 확대

산업사회에서 후기산업사회를 거쳐 정보화사회로 발전되는 과정에서는 여러 부문에서의 구조적 격차로 인한 갈등과 도전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산업화 과정에서 짧은 기간 동안의 고도경제성장 추진이 가져온 역기능적 유산, 즉 지역격차, 도·농간 격차, 영·호남등 지역간 격차, 농·공간등 부문간 격차, 그리고 계층간 격차 등 사회 제반의 구조적 불균형과 격차의 문제를 그대로 안은 채 정보화 사회로의 진전과정에서 파생되는 구조적 격차와 갈등의 문제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정보화사회에서 발생하는 격차는 정보를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또는 정보를 이용하는 자(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와 이용하지 못한 자(이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 간의 갈등의 문제와 전통산업과 새로운 정보, 통신산업 및 3섹타(금융, 서비스등) 산업간 격차의 양태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이중성 또는 이중사회의 존재는 정보화사회의 진전 또는 정보통신 혁명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즉 형평과 균형의 가치가 중요시될 때 따라 산업화과정에서 파생된 이중구조 또는 구조적 격차의 해소가 정치적·슈로 등장하여 이에 투자되는 재원규모가 막대하게 됨으로써 미래 문제에 투자할만한 여유와 관심, 재정여력을 갖지 못하게 될 것이다.

##### ① 계층간·세대간 격차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 계층간·세대간 격차의 문제는 정보활용과 기술의 집중화, 집권화 문제로 귀결된다. 특히 이러한 격차의 문제는 정보를 이용하는 측면과 정보기술을 다루지 못하는 측면의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즉 실제 정보를 활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정보를 수집·생산·관리하는 기술은 습득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런 상황하에서는 정보기술을 다루는 사람으로서 젊은 세대의 역할이 증대된다. 그러나 정보를 활용하고 있는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간의 역할분담에 조화를 이루지 못할 경우에는 세대간 격차와 갈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정보화사회에 있어서 세대간 격차의 문제는 산업, 지역간 격차의 문제로 가

지 광범위하게 확산될 것이다. 인력과 교육·기술·혁신은 상호작용의 동태적 과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세대간의 격차와 갈등은 정보화 기술을 습득한 젊은 세대의 참여 범위와 가능성을 제약함으로써 산업간 격차의 문제를 야기시킴과 동시에 혁신의 확산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 ② 농업의 퇴락

최근 GATT 사무총장에 의해 「예외없는 관세화방안」이 제기되어 활발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고, 그동안 미국과 대립된 입장을 보여왔던 일본이 미국의 입장에 동조하고 나서는 등 UR협상 자체가 깨지지 않는한 쌀시장 개방을 포함한 모든 농산품의 개방이 불가피하는 비관적 전망이 점차 현실화되어 가고 있다. 쌀시장이 개방될 경우 농업부문의 경쟁력 상실로 구조적 실업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할 뿐 아니라 농업의 소득기반 붕괴로 농촌의 생존기반 자체가 위협받게 될 것이다.

농산물시장 대외개방의 여파 이외에도 하나의 산업으로서의 농업의 존재를 위협하는 대내적 요인으로 국내 농산물시장 수급구조의 구조적인 취약성이 중요한 문제점으로 등장하고 있다.

우선 첫째로 국민들의 식생활기호가 점차 서구 취향으로 변하게 됨으로써 벼농사 중심의 농업구조하에서는 수급불균형의 구조적 문제가 야기될 수밖에 없으며, 미곡생산이 점차 줄어들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공해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국내 농산물에 대해서도 농약사용 농산물검사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국내 농업이 외국농산물과 비교하여 이러한 문제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인지 의심스럽다.

셋째, 농촌인구의 이농현상이 계속됨으로써 농업종사 인구의 노령화가 심화될 것이다. 농업고용은 점차 감소하여 1990년대 말경에 이르러서는 전체 고용의 10% 미만으로 낮아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업인구의 노령화는 농업의 생산성을 더욱 떨어뜨릴 것이다.

## ③ 지역간 갈등의 심화

지방자치의 실시와 더불어 지역개발의 욕구가 분출하면서 부족한 투자 재원 조달 및 산업유치의 명목하에 그동안 중앙정부가 보여왔던 식으로 과도한 지역개발사업의 남발 및 자연환경의 황폐화를 초래하는 개발방식을 답습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특히 지역이기주의 발현에 의해 지역간 중복투자 및 혐오시설의 회피 등의 지역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만일 우리경제에 저성장기가 도래할 지역개발의 문제는 어떠한 양상으로 전개될 것인가? 경제성장이 정체되고, 구조적 실업문제 등이 야기되는 상황이 전개될 경우 정보지식화를 바탕으로한 지역개발전략은 벽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부산의 신발산업, 대구의 섬유, 전자산업 등 지역산업의 도산과 구조적 실업이 발생한다. 이 경우에 실질소득의 증가가 정체되거나 오히려 감소되는 상황하에서는 노동집약적 산업화를 바탕으로한 지역개발로 실업문제 해결을 도모하고자 하는 전략이 세인의 관심을 끌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 아세안 등 후발공업국가와 직접 경쟁하는 상황하에서 노동집약적 산업이 과연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는 여전히 문제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 (2) 과도한 복지재정부담과 국민경제의 기반 침식

악화된 통치능력을 바탕으로 국민들의 복지욕구에 대응하고 정권에 대한 지지를 획득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제까지 축적해온 경제성장의 성과분배가 열쇠가 될 것이다. 만일 국민들의 복지수요를 전적으로 재정지출의 확대로 대응할 경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담세율의 증대와 재정규모의 팽창이 불가피하게 수반될 것이다. 이러한 「고복지-고부담형」의 복지사회의 전개는 다음과 같은 모순과 갈등을 야기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첫째, 조세부담률의 증대에 따라 기업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아울러 복지서비스에 기대어 생활가능한 사회계층이 늘어남에 따라 근로의 육감퇴, 창의력 상실 등이 유발될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국민경제의 생산성 저하와 국제경쟁력 약화로 연결됨으로써 대외지향적인 경제구조를 지닌 우리로서는 수출감소를 감내해야 될 것이다. 한국경제에 있어 수출의 감소는 곧 경제성장의 정체를 의미한다.

둘째, 한정된 국가재원이 과도하게 복지부문에 배분될 경우 상대적으로 첨단기술개발 및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에 공여될 수 있는 가용재원의 규모를 잠식하게 될 것이다. 즉, 산업사회에서 정보화사회로 진전해 나가는데 필요한 인력양성과 정보화, 자동화에 관한 첨단기술개발 등 국민경제의 하부구조배양에 투여될 재원규모를 줄임으로써 경제의 건전한 성장을 잠식하게 될 것이다. 경제성장력의 잠식은 결과적으로 추가적인 복지재원의 확충을 제약하게 될 것이다.

셋째, 복지서비스의 확대는 공공부문의 팽창과 관료주의적 경향의 만연으로 사회적 비능률과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저하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 (3) 소비자의 다양화·고급화와 기술적 지체

소비자들의 상품수요는 다양화·고급화·개성화되는데 반해 이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력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국내 제조업은 국내 시장에서 마저 경쟁력을 상실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국내 소비자들은 국내 상품시장의 개방에 따라 국내 기업의 제품보다는 외국 제품의 구입을 통하여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하고자 할 것이다.

미국·독일의 제조업 경쟁력이 일본의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인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주요한 원인의 하나가 신속적인 제조공정체제의 확보에 필요한 마이크로 알렉트로닉스 기술개발의 낙후에 있다는 사실은 정보통신 혁명의 기술 확보수준이 경쟁력의 확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을 극명하게 나타내 주고 있다.

소비자들의 가치관과 욕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로 되는 기술력의 확보에 실패할 경우 그 파급효과는 단순히 국내기업의 경쟁력 상실에만 그치는 것은 아니다. 정보통신기술의 낙후에 따라 사회혁신이 그만큼 지체될 것이고, 이에 따라 국민들의 욕구충족과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대응력이 약화됨으로써 구조적 모순이 확대재생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 (4) 환경오염의 심화

삶의 질의 추구에 따라 생활환경의 중요성과 공해문제의 심각성이 부각되기도 불구하고 경제가 악화될 경우 경제성장의 추구가 계속 정책목표로서 우선순위를 점하게 될 것이고 이와 병행하여 자동차 보급의 확대, 에너지 위기 등에 의해 환경오염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집단적 의사결정의 딜레마에 의해 시민운동단체의 오염감시활동도 기대한 만큼 활성화되지 못하고, 재정투자 위주의 오염방지대책의 추구는 재정부담만을 가중시키게 될 것이다.

### (5) 노조활동의 활성화 및 경제력 집중의 심화

정치·경제적 자유의 확대에 따라 노조활동은 더욱 활성화되는 반면에 경제력 집중으로 인한 부의 편중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우선 노조활동 및 노사분규의 확대는 생산성 향상을 초과하는 높은 임금인상을 가져올 것이다. 그 결과 임금인상으로 인한 제품가격의 인상이 불가피해져 한국상품의 대외경쟁력을 뒷받침해 오던 가격경쟁력의 하락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한국경제는 민주화라는 내압에 의한 임금상승으로 가격 경쟁력이 저하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경제자유화의 확대에 따라 경제력 집중이 소수 재벌기업에 의해 더욱 확대될 것이다. 예를 들어 금융자유화의 결과 은행주식이 재벌기업에 의해 과점된 상태를 초래할 가능성이 많고, 그럴 경우 몇개의 서로 다른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이 담합에 의해 의결권을 교환한다면 3~4인에 의한 경영권의 지배가 가능해진다. 그러면 은행의 각종 의결권이 왜곡될 수 있고, 정보의 비대칭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결과적으로 은행자유화에 의해 한국경제내에서 경제력 집중현상이 가속화될 수도 있다.

#### (6) 경제의 개방화 확대와 저성장경제의 도래

##### ① 경제블록화와 한국경제의 위상

아시아권의 경우에도 대만·홍콩·말레이시아·태국 등 중국을 중심으로한 남동연안국가들과 일본·소련 등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이 환태평양 경제권이 이루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경제권 구상이 겨냥하는 것은 미국-캐나다의 북미경제권·EC 등 세계경제의 블록화 움직임을 견제·감시·대응하는 체제를 구축하는 데에 있다.<sup>4)</sup> 이와 같이 환태평양경제권이 형성될 경우 과연 우리나라는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우리경제는 어떠한 위상에 처하게 될 것인가?

환태평양경제권이 구성될 경우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ASEAN 국가들과 공통적인 이해관계를 갖지 못한 채 경쟁관계에 직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일본과도 산업구조가 경쟁적인 관계에 서게 되는 입장에 처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이 환태평양경제권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일본과 다른 ASEAN 국가들과 보완적 관계 또는 독자적인 위상 중 어느 것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 아울러 환태평양경제권에 포함될 중국과 소련의 경제개방화 과정에서도 적극적 역할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많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경우 대외경쟁력이 약화되어 해외투자자본의 확보가 용이하지 않다.

둘째, 중국이나 소련에서 필요로 하는 시장수요가 시설재, 소비재 핵심 부품 등에 주어질 것임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도 이러한 수요는 일본에 의

4) 그동안 아시아권의 경제블록구상으로서 말레이시아 수상이 제안한 동아시아경제그룹(EAEG), 구 소련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제안한 동북아시아 국가들을 포함한 환태평양경제권 제안 등이 있었으며, 중국을 중심으로한 양안경제권과 환황해경제권, 그리고 서태평양경제권 등이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와타나베도시오·아오키 다케시 공저, 오정환 역, 『아시아의 경제지도 이렇게 달라진다』(동아출판사, 1991) 참조.

존하고 있는 등 시장수요에 대한 공급능력이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 국가들은 일본에 더욱 의존하게 될 것이다.

셋째, 우리나라의 기업이나 정부가 다른 나라에 대해 신뢰를 부여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기업이 안고 있는 이러한 신의의 문제는 외국투자실패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일본이 아세아·태평양권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고 미국의 영향력은 점차 한계에 달하게 될 것이다. 일본이 이와 같이 주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경우 한국경제의 위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한국이 그동안 심어온 한국과 일본의 동일시 현상은 미국과 서구의 견제를 유발하여 국내시장에 대한 개방요구가 더욱 높아지게 될 것이다. 반면에 국내적으로는 산업구조가 경쟁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품·시설재 등 기술집약적인 요소에 대한 의존이 더욱 심화되어 높은 가격으로 이를 수입함으로써 부가가치창출이 더욱 어려워지게 될 것이며, 일본이 세계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력의 우위 때문에 다른 국가로의 수입선 전환도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일본의 경우에는 대한 직접투자를 줄이고 자본의 제공을 회피함으로써 한국의 경제도립화를 유도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일본의 대동아공영권에 대한 환상과 집착이 여진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국·소련·북한과의 관계 개선과 밀착을 통해서, 그리고 ASEAN 국가에 대한 직접투자와 산업화 지원 등을 통해 한국의 도립화와 대일 종속을 유도하려는 노력이 가시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책이다.

## ② 경제의 개방화와 국내시장의 경쟁

경제개방화의 확대로 이제 국내에서도 국내기업 제품과 수입제품이 경쟁을 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더욱 촉진하고 있는 것이 국내 유통시장의 개방이다. 미국의 제조업이 일본의 기술력과 자본력에 밀려 동등·현상을 초래한 것과 마찬가지로 국내 제조업의 경우에도 유통시장의 개방에 적절히 대응치 못할 경우 국제경쟁력은 고사하고 국내시장마저도 잠식당하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국내시장마저 외국상품과 자본에 의해 잠식당하게 될 경우 경제성장이 낮아지는 저성장시기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경제는 새로운 전환의 시기를 맞게 될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이 상존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는 제조업의 경쟁력을

결정적으로 좌우하는 첨단기술에 대한 전문연구인력이 절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을 면치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제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전문인력 확충을 위한 연구, 인력양성체제의 전환이 불가피하게 요청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학의 학제개편, 연구체제의 개편 등이 수반될 것이다. 특히 연구활동이 점차 국책연구소에서 대학 중심체제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인력과 기술개발을 위한 정부의 정책노력도 큰 변화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시설투자와 같은 유형적인 투자 뿐만 아니라 무형적인 투자도 동시에 추구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첨단기술의 개발과정에서는 재정투자 이외에도 금융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기술개발 활동을 촉진시키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 ③ 금융·자본시장의 개방과 경제운용

불가항력적인 시대적 조류로 전개되고 있는 금융산업과 자본시장의 개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그 해악이 극명하게 될 것이다.

국내은행은 20% 수준에 육박하는 부실여신을 안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과도한 통제와 보호에 길들여 있는 나머지 금융기법이 선진국에 비해 낡아 외국금융산업에 대한 경쟁력이 취약한 실정이다. 따라서 국내금융산업은 개방에 앞서 금융산업의 자율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가 선결과제로 강조되고 있다.

증권시장의 경우에도 1980년대말의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한국증권시장이 세계 증권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9년말 현재 1.2%에 불과하며, 구조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기업 및 금융기관의 부실한 재무구조를 외적으로 무마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주식물량의 과잉공급, 투자자 보호장치의 미약 및 전문성 결여 등은 한국증권산업의 구조적 취약성을 대변하는 것들이다.

국내금융산업과 자본시장이 이와 같은 구조적 취약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산업과 자본시장이 개방될 경우 부정적인 효과가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선진금융기법 및 규모의 경제 등으로 비교우위를 갖추고 있는 미국·일본의 금융산업과의 경쟁에서 국내금융기관이 밀리게 됨에 따라 외국금융산업에 의한 금융지배와 국부의 해외유출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현재의 여건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산업과 자본시장이 개방될 경우 다음과 같은 부정적 효과들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국내 실질이자율이 국제수준을 상당 수준 초과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해외자본유입을 촉진시킬 것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큰 폭의 감소를 보이던 외채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여 단기적으로는 대규모 채무국으로 전락할 가능성

을 배제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도입된 자본이 추가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이에 따라 국내 명목이자율 수준이 상승되는 악순환을 되풀이할 가능성이 높다.

둘째, 국내에 유입된 해외자본은 교역재산업으로 일부 투입되어 무역수지의 개선에 기여하기도 하였지만 오히려 부동산, 채권 등 비교역재에 광범위하게 투입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유입된 외국자본은 오직 예상수익률에 의해서만 통제되기 때문에 만일 서비스업과 같은 비교역재산업 혹은 부동산 등과 같은 실질자산의 수익률이 생산적인 투자로부터 얻을 수 있는 예상수익률을 상회할 경우에는 유입된 자본이 비교역재산업의 과열이나 부동산 투기를 만연시킬 수 있다. 그런데 현재의 여건상 부동산투자의 예상수익률이 다른 어떤 부문의 투자수익률보다 높다는 점에서 해외투자자들은 일단 주식에 투자하는 방식을 통해 합법적으로 해외자본을 들여온 다음에 주식을 매각하여 부동산이나 고리의 채권을 매입하려고 할 가능성이 많다. 그럴 경우 외국자본은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보다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국내에서 고율의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소득분배의 불공평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셋째, 해외자본의 빈번한 유출입에 따라 정부의 금융통제력 상실을 초래하고 재정·금융정책의 효과를 제약함으로써 경제의 안정적 운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특히 환율조정이나 증시부진 등이 예상될 경우에는 극심한 자본유출 및 도피를 유발하여 경제운명을 교란할 위험성이 높다. 소규모의 개방경제일수록 그리고 자본이동이 보다 자유스러울수록 안정화정책수단으로서의 금융정책의 효과를 제한시킨다.

#### ④ 경제적 성과

경쟁력 상실로 인한 국제수지적자의 확대, 시설투자감소, 국내소비증가율 둔화 등이 의해 구조적 실업이 발생하고, 경제가 저성장기로 전환될 가능성이 많다. 아울러 일본에 경제적·정치적 종속이 더욱 심화될 것이다.

경쟁력 상실에 기인한 저성장기의 도래는 필연적으로 구조적 실업의 문제를 야기시킬 것이다. 지역적으로 편중된 구조적 실업의 발생, 정보통신 산업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한 성장지역의 발생은 지역간 갈등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 (7) 남북통일과 경제적 위상

향후 남북통일의 전망과 관련하여서는 단계적 통일방안과 일시적 통일방안



으로 수용할 가능성이 많다.

남북통일이 안고 있는 문제의 성격이 이러하기 때문에 일본이 전략적으로 이를 약탈할 가능성도 농후하다. 만일 한국이 경제적으로 일본을 추적할 가능성이 있거나 국제경쟁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가능한 여진이 조성될 경우 일본한 단계 등을 활용하여 통일의 시점을 조정함으로써 경쟁력의 상실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일본이 자본력과 기술력에 있어서는 세계를 제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상응한 정치력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그 영향력을 세계에 과시할 목적으로 한반도 통일문제를 일차적인 대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

#### (8) 시나리오 I의 동태적 모형

비판적 관점에서 작성된 시나리오 I의 내용과 주요 부문별 상호작용 관계를 도식화해서 나타내던 [그림 1]과 같다.

## 2. 시나리오 II : 낙관론

### (1) 이종사회구조의 해소

사회의 이종성은 정보기술을 이용할 경우 문제해결의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게 될 것이고, 첨단정보기술의 혁신을 통하여 기존산업(특히 제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기존산업과 첨단정보통신산업간의 단절과 격차의 이종구조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 ① 혁신의 도입과 젊은 세대의 참여 확대

세계 경제환경의 변화에 적응하면서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유지하려면 국내산업의 지식, 기술집약화가 가속화되어야 한다. 정보화사회에서 지식과 기술의 축적은 기업구성원의 지적능력을 배양하는 것이다. 혁신지향적인 경영체제는 지적능력의 배양과 발전을 촉진시키는 경영조직과 기술문화를 요구한다. 아울러 정부부문에서도 혁신지향적 기업경영을 유도하는 기업 환경의 조성과 지식, 기술집약화를 도모하기 위한 지원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즉 지식·기술집약화를 지원하는 기술 개발지원체제 및 교육훈련제도와 사회간접자본 등 산업하부구조도 첨단기술의 경쟁우위를 지원할 수 있는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기업·행정체제 전반에 걸친 혁신의 필요성은 창의력과 열정을 가진 젊은 세대의 참여를 유도하게 될 것이다. 인력과 교육·기술·혁신은 상호동태적 과정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혁신의 도입과정에서 젊은 세대의 참여가 개량됨으로써 세대간 역할분담과 협조관계를 구축하여 세대간 갈등과 격차는 원만히 해소될 것이다.

## ② 새로운 고용기회의 창출

정보통신기술의 혁신적 활용 등 정보화사회의 전개에 따라 직종 및 기능 공인이 세분화됨으로써 새로운 고용기회가 창출될 것이다. 특히 정보화사회에서는 서비스분야와 고도기술전문직으로의 고용형태의 전환이 계속 확산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경제의 지속적 성장에 힘입어 비교역재부문에서도 직종의 세분화 등 고용기회가 계속 창출되어 이농인구, 경쟁도태산업 등에서 발생하는 실업자들을 흡수함으로써 구조적 실업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 ③ 농업기반의 확충

산업화과정에서 파생된 농·공간 격차 및 도·농간 격차를 집약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농업문제의 경우에도 농업인구의 대폭적인 감소와 생산의 특화노력 등에 의해 그 회생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농업의 부가가치 창출을 높이기 위해 농민들이 직접 생산·가공·유통을 일괄적으로 담당하려는 노력이 전개될 것이다. 특히 각 지역의 전통과 문화, 산업적 특성을 활용, 이미지를 살리면서 생산을 특화하여 지역적인 생산을 다원화하는 운동이 확산될 것이다. 일본에서 전개되고 있는 소위 「一村一品」운동과 유사한 생산특화활동을 통해 시장분할로 인한 독점력 행사의 이점을 살려 부가가치의 제고에 노력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운동은 지역주민의 자주적 노력을 통해 전개되는 가운데 자발적인 시민운동의 참여를 통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 ④ 지역정주권 구상과 지역개발

시도와 농촌, 영남과 호남 등 지역간 격차가 심화되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특정 지역에 인구가 집중됨에 따라 지역개발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통한 인구분산 정책이 지난 70년대 중반이래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지역의 인구집중방지에는 실패하였다.

이러한 정책실패의 근본원인은 수도권집중을 인위적으로 방지하려는 소극적 방안을 중심으로 정책이 구성된 나머지 지방대도시 및 중소도시의 기능확충 및 유인요인의 배양에 실패한 데에 있다. 이들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집권적인 기획체제를 중심으로 계획이 수립된 나머지 현지의 필요와 요구가 반영될 수 있는 여지가 넓지 않았다.

둘째, 국토기획이 도로,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을 주요 대상으로 전개된 나머지 그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데에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



하였다. 즉, 국토기획이 지역발전과 연관된 정주권개편을 발전시키지 못하였다.

셋째,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의료, 복지, 교육 시설의 과충 및 질적 수준 제고에 실패하였다.

넷째, 강력한 중앙집권체제하에서 정치·행정부문이 여타 부문을 압도한 나머지 지방의 문화적 전통도 중앙에 예측되는 과정을 밟아 왔다. 그리하여 중앙과는 다른 지역적 특성과 기반을 갖고 있던 문화예술활동이 점차 중앙 문화활동에 대속되면서 자주적인 지역문화예술활동이 그 기반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는 지역주민들의 전전한 여가 및 문화활동공간이 상실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보화사회에 있어서 국토기획과 지역개발은 당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적 수준을 도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배양하는 정주권개념에 기초하여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지방대도시를 정보화, 지식화하여 정주권개념을 정착시키는 것이 인구분산을 도모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정주권이 당해 지역주민들의 애착과 선호를 바탕으로 건전하게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첫째, 지역적 특성에 부합하는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직업다운 직업을 만들어 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주적 산업화 노력이 전개되어 실질적인 부의 분산이 이루어지고 금융·자본의 지역적 독자성과 자주성을 보장함으로써 그 지역의 자본이 그대로 그 지역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정보화사회에 있어서 이러한 성격을 띤 직업의 창출은 곧 정보지식화된 서비스 직업을 열거나 공급할 수 있는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지역산업과 직업창출이 연계되는 가운데 이를 구조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지역산업과 교육활동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지역개발과 관련하여 지방대학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부각된다. 지방산업과 지방대학의 산학협동을 통하여 인력을 개발하고,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구조조정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정보화 사회의 전개와 더불어 지방대학은 당해 지역의 정보센터로서의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의료, 보건 등 복지서비스가 확충되어야 한다.

넷째, 자치적인 문화예술활동의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건전한 여가활동과 문화 예술활동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다섯째, 지역주민들이 행정정보 및 행정업무 처리상 서울등 수도권지역의 주민들에 비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행정의 능률화와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즉, 지역주민들의 제반 활동과 관련된 행정기능 중 현재 중앙정부가 담당하고 있는 기능의 지방이양을 통하여 행정서비스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특히 국토개발과 지역개발과 관련된 중앙집중적 계획체제를 분권적 체제로 개선하는 동시에 기획의 중점도 물리적 기획에서 전략적 종합화기능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지역간 원활한 교통망 등 물리적 시설의 확충 보다는 그 지역의 특성을 살려 소프트화·정보화할 수 있는 지역계획을 수립·집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제시한 지역정주권의 제조건을 창출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방대학이 그 지역의 문화·교육·산업·정보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긴요하게 요구된다. 실제에 있어서 지방대학이 이러한 역할을 얼마나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느냐에 따라 지역개발의 성과 및 지역정주권의 정착여부가 좌우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정주권개념과 정보화·소프트화에 입각한 각 권역별 지역개발의 방향은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 첫째, 중부권역

대전을 중심으로한 아산만항구, 군산항, 청주공항, 대덕과학단지, 서산공단, 비제유적지를 연계시켜 중부권을 종합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부권역은 중국시장의 개방 및 발전과 연계시키기 위하여 자동화 시설제에 관련된 생산체제를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둘째, 서남권역

목포와 광주를 연계시켜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동 권역은 광주를 정보문화도시로 발전시키는 구상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호남서남권역도 중국시장의 개방과 발전과 연계시키기 위하여 자동시설제에 관련된 생산체제를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 셋째, 동남권역

부산-창원-울산을 연결하는 동남권역의 경우에는 부산에 제2증권시장을 개설하는 등 독자적 자본·금융시장을 개설하고, 김해공항을 국제공항으로 확장함으로써 서울영향권에서 벗어난 독자적 국제도시로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동남권역의 독자적 발전과정에서 파생되는 토지공급의 부족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인근지역의 Green-Belt를 도시지역으로 편입하여 개발하는 것이 바람

직할 것이다.

#### 넷째, 강원권역

강릉-속초-설악을 연결하는 강원북부지역은 자연경관이 빼어난 지역적 특성을 살려 관광지역으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다섯째, 서울·경인지역

경인지역은 도로, 항만등을 보완함으로써 자체적으로 발전하도록 한다. 특히 미국, 서유럽국가들이 한국을 일본시장 진출의 전진기지는 삼는 등 아시아지역에서의 우리의 역할이 강화될 경우 서울에는 국제화된 자본·금융시장이 개설될 것이고, 영종도 공항 및 아산만항 개발이 촉진될 것이다. 그리고 인천을 중심으로 텔레포트(teleport)가 구축될 것이다. 아울러 무역전진기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지역을 중심으로 한 고도의 통신망시설의 확충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 여섯째, 제주권역

제주권역은 홍콩의 중국반환과 연계하여 관광지역이나 상품판매지역 또는 자본시장의 이전을 모색함으로써 일본, 대만, 홍콩, 중국 등을 겨냥한 종합휴양지나 상업지역으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제주권역을 별도의 행정권으로 지정하여 무비자입출국이 가능한 자유출입지역으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한편, 국제화시대에 있어서 지역개발은 어떠한 방향에서 전개될 것인가?

국제화 시대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관문관련 행정을 전반적으로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관세행정, 공항관련행정, 항만관련행정 등을 개선함으로써 입출국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여권업무도 지방에서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분권화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이다.

#### (2) 복지수요 충족의 다원화

급격한 산업화과정에서 심화되어온 불공평한 부의 분배를 시정하고 저소득계층 및 사회적 소외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국민의 욕구발현을 강하게 억제하여 오던 개발독재체제가 약화되고 정치, 행정체제의 민주화가 진전됨에 따라 국민의 욕구분출과 참여통로는 확대되는 반면에 이에 대응하기 위한 통치능력은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국민의 복지욕구에 대한 정치·행정체제의 대응성과 감수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서구유럽 복지국가의 경험은 우리나라의 복지서비스 공급체제의 설계

게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즉, 과도한 국가재정부담에 의한 복지서비스 공급이 초래하는 국가경제의 경쟁력 약화와 이로 인한 복지서비스 공급의 확대 재생산 실패의 경험에 비추어 우리나라는 다양한 통로를 통한 복지욕구의 충족을 도모하고자 할 것이다. 재정부담의 확대를 통하여 일정 수준 복지욕구를 수용하는 가운데 민간기업의 역할증대, 민간의 자발적 조직, 일부 상업적 복지 사업의 등장 등 다원화된 복지서비스 공급체제를 갖추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다원화된 복지서비스 공급체제에 의하여 복지서비스 공급을 확대하는 가운데 효율성 제고 노력을 전개하게 될 것이다.

소득분배의 공평성은 개개 국민들에게 체화된 자본과 기술의 생산성과 경쟁력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에서 재정역할도 소수 빈곤계층에 대한 직접적인 이전지출 보다는 교육 및 훈련서비스의 확대에 중점을 두게 될 것이다. 실업보험제도도 선진국의 경험에 비추어 불 때 실업에 대한 개념이 모호할 뿐 아니라 근로의욕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도입가능성이 희박할 것이다. 다만 노령인구의 증가에 따라 노인층에 대해서는 별도의 복지제도가 마련될 것이다.

### (3) 소비의 다양화·고급화에 대한 기술적 대응

개인이 추구하는 가치관의 변화는 후기산업사회 및 정보화사회의 도래를 촉발하는 주요 동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즉, 개인이 추구하는 삶의 목표가 물질적 욕구의 충족에서 삶의 질의 문제로 전환됨에 따라 이에 상응한 사회·경제적 구조의 변동이 촉발될 것이다. 산업사회에서 기술혁신과 대량생산 체제의 구축에 따른 생산력 증대로 기본적인 물질적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에 따라 획일화된 내구재 수요가 점차 다양화·고급화·개성화되는 추세를 보일 것이다. 특히 기술혁신에 따른 상품의 질적 수준 제고와 가격의 하락은 종전과 동일한 수준의 소비지출을 통해서도 보다 질적으로 우수하고 다양한 상품의 구입을 뒷받침해 주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소비자 수요의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기업활동이 점차 소품종대량생산체제에서 다품종소량생산체제로 전환될 것이다. 즉, 소비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개성이 강하고 기능이 우수한 상품을 소량으로 생산하게 될 것이다.

개별기업 또는 우리나라 전체의 제조업이 이러한 전략적 변화과정에서 경쟁력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느냐를 결정적으로 좌우하는 것은 정보기술, 즉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의 혁명수준이다.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혁명의 산물인 시축적 제조공정체제(FMS: Flexible Manufacturing System)는 기계 가공이나

조립에서 자동생산시스템을 이제까지의 소품종 대량생산형에서 다품종 소량생산형으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주는 토대를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이 후기산업사회 또는 정보화사회에서 활용되는 기술은 종전의 역학적 자동화에서 두뇌적 자동화로 변천하면서 신속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다양한 이용 가능성을 높여줄 것이다.

한편, 광전자, 방송, 통신, 컴퓨터네트워크 등 뉴미어와 네트워크기술의 혁신은 공간적 범위를 더욱 확대하고, 거리의 근접성을 더욱 제고시켜 주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시장형태가 변하게 될 것이고, 상품공급의 현지성을 높여주게 될 것이다.

#### (4) 환경친화적 경제성장의 추구

삶의 질의 추구는 생활환경의 중요성과 공해문제의 심각성을 부각시키게 될 것이다. 그러나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재정지출의 확대, 환경산업의 발달, 시민운동의 광범위한 확산, 환경친화적 정보통신기술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됨으로써 환경친화적 경제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오염의 문제는 크게 도시지역의 대기오염문제와 수질오염문제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우선 도시대기오염문제의 경우 연탄가스과 자동차 배기가스가 주범이다. 도시연료의 경우 앞으로 시베리아 자원개발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게 될 경우 가스공급이 확대됨으로써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의 투자불확실기에 비추어 부산지역에 제 2의 LNG 도입기지를 설치하여 도시연료 뿐만 아니라 도시내·도시인근의 제조업의 사용 에너지 전환도 고려되어야 한다. 문제는 자동차 배기가스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동차 가스배출규제 기준을 선진국수준 이상으로 높임으로써 대기오염을 방지하는 동시에 자동차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효과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정보통신네트워크의 발달에 따른 재택근무의 확대, 지역간 정보유통의 원활화 등은 자동차 이용의 기회를 줄임으로써 오염방지에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수질오염은 근원적으로 폐수의 문제로 귀결된다. 따라서 수질오염방지를 위해서는 재정지출의 확대를 통한 폐수처리시설의 확충, 오염배출을 감시하는 시민운동의 광범위한 확산 등에 의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수질오염의 문제는 자발적인 시민운동의 뒷받침이 없이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정부의 노력은 시민운동의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주어지게 될 것이며, 학교 및 사회교육의 활성화에도 중점을 두게 될

것이다.

환경오염의 발생을 줄이고, 오염유발자에 의한 자발적 해결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환경산업이 발전하게 될 것이다. 기업에 환경보호를 위한 정책적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환경투자를 촉진시킴으로써 환경산업발전의 기반이 형성될 것이다.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환경친화적 기술을 갖춘 기업만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지지를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환경산업의 발전 뿐만 아니라 자연환경 보존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 (5) 민주화·자율화시대의 노사관계 및 경제운동

일반적으로 경제성장이 진전되고 일정 수준 이상의 부의 축적이 달성되면 더 큰 자유와 정치적 민주화를 회구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진다.

우리나라에서도 6.29선언 이후 하나의 큰 흐름으로 정치적 민주화가 전개되고 있다. 정치적 민주화가 진전됨과 더불어 그 효과가 경제적 측면에서도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그동안 강압적으로 억압되어 왔던 노조활동이 봇물터지듯 확산되면서 노사분규의 열풍이 한동안 경제를 휩쓸었다.

그러나 향후 노사관계는 힘의 균형과정을 거친 후 노동의 의미가 대규모 조끼보다 자영 내지 소규모집단의 개념으로 전환되며, 각 노동자의 성취감을 증가하여 창조성을 전제로한 생산성·다양성의 제고 노력이 확산될 때 자본가와 노동자의 대립이라는 의미는 사라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기술과 노동인력의 대체관계 및 경쟁관계의 증대와 기업생산활동의 다품종 소량생산체제로의 전환에 따른 소규모 노동인력을 중심으로한 기업활동의 보편화현상 등은 노사관계의 본질적 전환의 결정적 계기를 이루게 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혁신지향적 경영체제의 구축 필요성에 의해 기업성원 전원의 혁신활동을 유발하는 참여적 경영조직이 형성되고, 정보의 수집과 창조에 적극적으로 정보의 교환과 공유를 통하여 합리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며, 타협과 속득을 통하여 문제해결에 노력하는 혁신지향적 기업문화가 정착될 것이다. 이를 위하여 경영성과의 공정분배, 경영실적의 성실한 공개, 인간중심의 경영관리를 통하여 노사간의 신뢰를 구축하고 종업원의 귀속의식을 고양하게 될 것이다.

#### (6) 개방화·국제화시대와 안정된 경제성장의 전개

##### ① EC·미국의 일본시장 공략과 한국의 기지화 가능성

향후 일본의 자본력과 기술이 세계시장을 압도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EC·미국 등 외국기업의 일본시장 공략전략도 더욱 가시화될 것이다. 일본시장을 공략하는 것이 살아남는 조건이라는 인식이 확산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전개될 경우 우리나라가 일본시장 공략을 위한 EC·미국 기업들의 전진기지로 선택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에 60만 이상의 제일교포가 거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화와 사고방식이 다른 서구 국가에 비해 시장진입에 상대적인 강점을 가지고 있다. 아울러 1997년에 홍콩이 중국에 반환됨에 따라 그동안 홍콩이 수행하고 있는 세계무역의 기지 기능을 어디엔가 이동, 분산시키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는 점에서 한국의 기지화 가능성이 높다.

만일 한국이 일본시장 공략 및 세계교역의 기지화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경우 미국과 EC 국가의 기술력을 결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선진국으로의 도약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미국과 EC의 기술력을 수용하여 산업화할 수 있는 능력, 즉 응용능력과 신용력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가이다. 이런 점에서 환경 자체가 우리의 능력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이에 따라 전략대안도 달라지게 될 것이다. 여기서 우리의 능력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요소는 역시 인력과 기술력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교역의 기지화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도·경제적 여건 등 제반조건의 확충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지화 조건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요소로서는 교통·통신·자본시장 등을 들 수 있다.

첫째, 교역기지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발전된 통신시설이 확보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정보·통신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정보·통신시장의 개방 확대는 이러한 효과를 높여 주게 될 것이다.

둘째, 도로·철도 등 대량 교통수단·부두·항만시설 그리고 공항시설 등이 확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장·단기적인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계획의 수립과 집행노력이 집약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금융시장의 개방 및 자본자유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점에서 경쟁을 통한 금융서비스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자본시장의 개방을 통하여 한국에 진출하는 외국기업들의 국제거래를 위한 금융서비스지원이 무리없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② 금융·자본시장의 개방과 경제운용

향후 국내 금융·자본시장은 대내적으로는 자율화, 대외적으로는 개방화의

인력을 겪게 될 것이다. UR협상의 핵심의제중의 하나로 서비스산업의 자유무역화가 추진됨에 따라 이제 국내 금융산업 및 자본시장의 자율화 및 국제화는 기스릴 수 없는 거대한 흐름속에 휩싸이고 있다. 한미간 쌍무협상 등 그동안 진행되어온 개방압력의 결과 금융산업은 완전개방된 것이나 다름없고 보험업, 증권업 등 자본시장도 개방의 단계를 넘어 완전개방을 위한 일정 조정만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 경제자유화의 순서에 있어서 국내실질이자율이 해외실질이자율보다 높거나 낮을 때에는 자본시장의 개방으로 심각한 자본유입 또는 유출위험상이 발생하게 되므로 자본시장개방에 앞서 국내금융시장의 자유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거의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나라도 자본시장의 개방과 병행하여 불완전하나마 금융산업의 자유화, 자율화 노력이 추진되고 있다. 향후 금융산업의 자유화·자율화 노력이 본격화되면 그 밖의 경제정책 시행과정에서 실물경제의 성장을 위한 원활한 자금동원의 명목하에 시행되어 오던 정부 및 은행감독원 등의 과도한 개입과 통제, 즉 진입제한·업무영역통제·이자율통제 등의 각종 금융규제 활동이 완화 또는 철폐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시중은행의 심사대출기능 강화는 국내은행 자율화 조치의 핵심을 이루게 될 것이다. 국내은행에 대한 자율화 조치와 병행하여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설치를 좀더 개방하는 가운데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부여 하고 있는 특혜를 없애고 이들에게만 적용되는 각종 규제도 점진적으로 축소 될 것이다.

금융산업의 자율화·개방화가 선행하여 진행되면서 자본시장, 특히 증권시장의 개방의 확대될 것이다. 증권시장의 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국내증권업의 구조적 취약성의 개선노력이 전개될 것이다. 투자자 보호장치의 강화, 기업공시제도의 개선, 내부자거래나 상호주보유의 규제 등 상장기업에 대한 의무 및 규제를 강화하게 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외국자본의 진출에 따른 국내기업의 경영권보호를 위한 방안이 강구될 것이다. 주식의 보유를 통한 외국자본의 간접적인 상장회사의 통제를 방지하기 위해 국내 기관투자자의 주식확보 규모를 높이고,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기관투자자로 전환하는 노력을 전개하게 될 것이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주식소유 상한선을 낮춰 고다보유의 유인을 없애고, 증여세·상속세 등의 조세제도의 보완을 통하여 기업주의 주식소유집중을 억제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보다 강력하고 직접적인 규제수단으로서 외국인에 대한 투자업종 및 지분율의 제한, 차등주식의 발행, 무의결권주식의 발행 등이 검토될 것이다.



금융·자본시장의 개방은 통화관리정책과 경제성장전략에도 궤도수정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우선 통화정책의 경우 안정된 이자율 유지가 불가피하게 요청됨에 따라 종래의 목표통화량방식에서 통화량·금리·환율이라는 세가지 안정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3자간의 연계성을 높이고 통화를 신축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화폐수량설적 사고에 기초한 통화관리정책의 완화가 불가피할 것이다. 경직적인 목표통화량의 특성에 집착하는 것은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실물부문의 안정적 성장을 저해하는 결과만을 낳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통화운영의 기본방향이 기업여신의 공급에서 소비자금융의 공급으로 전환될 것이다. 안정성장기 또는 저성장기에는 기업의 상품공급을 중심으로한 경제 운용에서 소비자의 상품서비스 수요로 경제운용의 중심이 옮겨가게 될 것이다.

금융·자본시장의 개방화·국제화가 확대됨에 따라 경제운용은 안정성장 정책으로 전환될 것이다. 이러한 경제운영 기초의 변화는 실질환율과 실질이자율의 안정화 필요성에 기인한 것이다. 경제가 안정성장을 유지하게 되면 성장의 감속에 따라 민간기업의 자금수요압박이 감소하게 된다. 이는 그렇지 않았을 경우와 비교해 볼 때 시장이자율에 하향압력을 가해 국제화에 따른 급격한 자본유입을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경제의 안정성장에 따라 재정투융자 확대등 정부의 재정부담의 경감으로 재정적자의 발생을 줄여 이자율의 안정적 유지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 ③ 국제적 성과

세계경제가 지구화, 개방화됨에 따라 정부주도하의 산업보호나 보조는 더 이상 정책수단으로서의 의미를 갖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하에서는 국민경제 또는 국가경제라는 의미는 퇴색하고, 개개 기업의 경쟁력만이 진정한 의미의 국민생활의 안정과 더 나아가서 국가의 안전을 담보하는 안전판이 될 것이다. 따라서 종전의 거시경제적 변수, 즉 통화·금융·환율·고용 등의 자금순환과 관련된 거시경제변수를 중심으로한 경제정책의 운용은 그 효과가 상당히 제약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점에서 경제정책의 초점은 기술·생산성·인력 확보·금리·인건비·물류비용 등 기업의 경쟁력 결정요인에 맞추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 경제의 개방화·국제화 시대에 있어 한국경제의 성장은 어떠한 양상

으로 전개될 것인가?

우리나라가 EC 미국의 일본시장 공략의 전진기지로 선택될 경우, 이들 국가의 기술력을 결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의 경쟁력 확보의 호기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더 나아가서 금융·자본시장의 개방에 의해 국내 실질이자율이 하락하고 부족한 투자재원의 조달로 시설투자를 확충하고 금리비용을 줄임으로써 유리한 경쟁조건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경쟁력의 회복에 의해 국제수지 적자를 해소하고, 인플레이션의 압박에서 벗어나고, 경제는 안정된 성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 (7) 통일환경과 한국경제의 위상

한국의 사회전반 및 경제구조에 가장 광범위한 영향을 가져올 수 있는 변수는 남북통일의 문제이다.

그동안의 이질적인 발전과정에서 심화되어온 사회구조적 격차, 남북한 사회의 권력관계 등을 고려할 때 일시적인 남북통일의 기대는 난망한 일이다. 이런 점에서 남북통일은 단계적 과정을 거쳐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단계적 과정을 거쳐 남북통일이 전개될 경우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경제력을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남북통일에 소요되는 자금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남북통일에 따라 북한에 새로운 소비시장이 형성됨으로써 국내시장만으로도 일정수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해 줌으로써 국내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일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가경제의 해외의존도를 줄임으로써 자생적 발전가능성을 높여 주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정치적 측면에서 새로운 복지수요의 증대와 지역통합의 과제를 부과하게 될 것이다.

#### (8) 시나리오 II의 동태적 모형

차관적인 관점에서 작성된 시나리오 II의 내용 및 주요 부문별 상호작용 관계를 도식화해서 나타내면 [그림 2]와 같다.

